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08
----------	-------

발의연월일 : 2022. 9. 23.

발 의 자 : 소병철 · 김정호 · 강병원
박재호 · 서삼석 · 안규백
임호선 · 오영환 · 정일영
홍영표 · 위성곤 · 맹성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톱킹 살인사건으로 스톱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커지는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피해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스톱킹행위자가 집요하게 연락하며 합의를 강요하는 등 추가 피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조항을 삭제하고, 스톱킹 행위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직장·학교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업무·생활권에 놓여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기관의 관리자에게 격리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또한 긴급응급조치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톱킹

행위에 ‘주거·직장·학교 등과 온라인공간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를 수집·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하는 행위를 추가해 거주지 등에서의 피해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의 정의에 주거·직장·학교 등의 장소나 온라인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의 개인정보 또는 성범죄에 이용할 의사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바목 및 사목 신설).

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다.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신고자, 사법경찰관, 검사의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와 동일한 직장·학교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업무·생활권이 중복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과 법원은 해당 직장·학교 및 기관의 관리자(이하 “동일생활권 관리

자”라 한다)에게 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통지를 하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안 제9조제3항).

마.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의 위치확인
과 동일생활권 관리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자의 활동장소 이동·변경
등 격리 권고를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바.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통보와 법원의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동일생활권 관리자에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장소·배치 전
환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17조의2 신설).

사.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안 제18조제3항 삭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족”을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과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또는 성범죄에 이용할 의사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하는 행위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바목의 행위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스톱킹행위자의 위치 확인

제5조제5항 중 “긴급응급조치기간은”을 “최초의 긴급응급조치기간은”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긴급응급조치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 판사는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상대방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등과 그 법정대리인, 신고자, 사법경찰관, 검사의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기간의 연장은 그 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1개월의 범위에서 한다.

③ 긴급응급조치기간의 연장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와 동일한 직장·학교,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업무·생활권이 중복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이하 “동일생활권”이라 한다) 사법경찰관은 해당 직장·학교 및 기관의 관리자(이하 “동일생활권 관리자”라 한다)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를 “검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동일생활권 관리자에게”로 한다.

5.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확인

6. 제6조제2항의 동일생활권 관리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자의 활동 장소 이동·변경 등 격리 권고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동일생활권 관리자의 조치) ① 동일생활권 관리자는 제6조제2항과 제9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활동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동일생활권 관리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u>가족</u> 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 ----- ----- ----- ----- <u>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 한다)</u> -----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바.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u> <u>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등</u> <u>의 개인정보 또는 성범죄</u> <u>에 이용할 의사로 사생활</u> <u>에 관한 정보를 수집·기</u> <u>록·저장·보유·가공·편</u> <u>집하는 행위</u>
<u><신 설></u>	<u>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u> <u>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u> <u>률」 제2조제1항제1호의</u> <u>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바목</u> <u>의 행위</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② (생략)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 ④ (생략)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

-----.

1.·2. (현행과 같음)

3.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확인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최초의 긴급응급조치기간은
-----.

제5조의2(긴급응급조치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 판사는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상대방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등과 그 법정대리인, 신고자, 사법경

	<u>찰관, 검사의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기간의 연장은 그 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1개월의 범위에서 한다.</u> <u>③ 긴급응급조치기간의 연장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u>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와 동일한 직장·학교,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업무·생활권이 중복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이하 “동일생활권”이라 한다) 사법경찰관은 해당 직장·학교 및 기관의 관리자(이하 “동일생활권 관리자”라 한다)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 ----- -----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② (생략)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5.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확인

6. 제6조제2항의 동일생활권 관리자에 대한 스톱킹행위자의 활동 장소 이동·변경 등 격리 권고

② (현행과 같음)

③ -----
-----검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동일생활권 관리자에게-----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동일생활권 관리자의 조치) ① 동일생활권 관리자는 제6조제2항과 제9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스톱킹행위자에 대하여 활동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동일생활권 관리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자를 보

<p>제18조(스토킹범죄) ①·② (생략)</p> <p>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	<p><u>호하기 위하여 활동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18조(스토킹범죄) ①·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	--